

Vol.18

2025 SPRING

다문화 사회문제와 노인일자리 정책 현황



Contents

권두언

02 2025년 노인일자리 정책방향과 다문화사회 노인일자리 역할
이인재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교수

명사칼럼

04 다문화사회의 의미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책이슈

08 한국 다문화정책 현황과 과제 : 미국 이민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6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22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민자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26 다문화지원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강해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부 부장

현장이슈

30 다문화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일 자리를 위하여!
이은옥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사업팀장

통계리뷰

36 한국은 이주민을 맞을 준비가 돼 있을까?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우리동네 노인일자리

41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 사업단!
원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차장

권두언

2025년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과 다문화사회 노인일자리 역할

2025년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이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적 고용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단순히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노인일자리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109만 8천 개(예산 약 2조 1,847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2023~2027)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반복적인 일자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활동역량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노년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활동역량(건강, 의사소통, 사회성 등)에 대응하는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민간형 노인일자리 경우 기존의 경비 청소 등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 확

대에서 벗어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T-플랫폼 일자리와 같이 디지털 기술 및 기기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 보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2025년 신설)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기여하는 양질의 노인일 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동 사업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노인이 육아지원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대 간 교류 증진과 지역사회 연계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공공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현재 사업은 보다 체계화되고 문화체육관광부(ex. 이야기 할머니), 산림청(ex.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관련 행정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활용한 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갈등 해소는 물론이고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포함)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 4.89%, 2024년 5.2%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외국인 유치에 적극 나서

고 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우수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4년 말 기준 263,775명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국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 학생(233만 명)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학습 병행을 통해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교육과 돌봄 지원을 보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문화교류, 나아가 문화적 동화(assimilation)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일 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노인일 자리를 통해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인재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교수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문화사회의 의미

다문화와 다문화사회

문화(culture)란 어떤 사회의 주민이나 집단이 가진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그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문화(multiculture)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문화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다문화'는 언어, 문화, 관습,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을 간직한 사회를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고 한다.

다문화사회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민족, 인종, 종족 집단으로 구성된 나라를 지칭하지만, 독일, 한국 등 외국 출신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으로 주류 사회와 구분되는 여러 민족, 인종, 종족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대량 이주는 국민 국가의 민족, 인종, 종족 집단 구성을 변화시킨다.

한국에는 외국 출신 이주민이 1980년대 말부터 들어왔고, 그 후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성격을 점점 더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종족적, 문화적 동질 사회(homogeneous society)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한 것이다. 사람은 출신국을 떠나 외국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더라도 원래의 문화를 간직한 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1980년대 말부터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기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접변(文化接變, acculturation)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국내 언론 또는 학계 일부에서는 "OECD에서 '국내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5% 이상이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규정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주민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규정한다는 통념을 반영한 것인데,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OECD는 다문화·다인종 국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이주 없이 만들어진 다문화사회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문화사회를 정량적으로 규정하려 시도하지 않았다.

다문화사회는 인종 집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현실이지만, 때로는 다문화사회와 다인종사회가 동의어가 아닐 수 있다. 미국 CIA는 한국과 북한을 소수 인종 집단(ethnic minorities)이 존재하지 않는 "동질적"(homogeneous) 사회로 평가한다.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개인'은 다수 존재하지만, 그들이 '소수 인종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한다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이지만 다인종 사회는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갈등과 문화적 계토

다문화 상황은 옳거나 그르다, 좋거나 나쁘다 등의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적 기준이 여러 개 병렬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동을 경험하고, 때로는 문화갈등이 발생한다. 문화갈등은 '비공식 규범 간 충돌'과 '법제도와 비공식 관습 간 충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기존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도덕규범·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과 '한국의 실정법과 이주민 출신국의 문화적 관습'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은 그 양상이 다르다. 전자는 상호 이해 수준을 높임으로써 해소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에 따라라.”라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이 한국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출신국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근친혼(近親婚) 및 중혼(重婚) 금지 규범에 대한 도전이 가끔 발생하였다. 한국의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근친,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3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 혼인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4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 혼인을 허용하며, 이슬람 문화권 일부 나라에서는 ‘부계 4촌(친사촌) 간 혼인, 즉 남자 형제들끼리 자신들의 아들딸 간 결혼을 당연하게 여긴다. 외국 출신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출신국 문화를 간직하며 생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근친혼 금지 범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한국 역사에서도 신라 김유신-김지소 부부, 고려 광종-대목왕후 부부 등의 근친혼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1,000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이다.

또한, 한국의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일처제’를 공식적으로 견지한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 일부 나라에서는 4처까지의 중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서구 몇몇 나라에서는 폴리아모리(polyamory) 문화, 즉 개인이 동시에 여러 사람과 로맨틱한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관행을 가진 경우도 있다. 한 외국인 남성은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긴 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본국을 떠나며 ‘두 집 살림’을 하다가 그 사실이 밝혀져 이혼하였고, 그 후 법무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그에게 있다는 근거로 그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

허하였다. 이주민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과 이혼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 형식상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전 배우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중혼 현상은 이주민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진 『아내가 결혼했다』에서처럼 폴리아모리를 영위하는 한국인도 있다.

이처럼 극단적 사례는 당연히 그 수가 매우 적지만, 기존 한국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점에서 극심한 문화갈등을 초래한다. 이로써, 다문화 상황은 구태여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식탁 위의 다문화’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즉, 다문화란 단순히 한국에서 튀르키예 음식을 먹고 중국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미묘하지만 무거운 사안들도 동반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 출신 이주민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집단을 형성해 왔다. 그들 중 일부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만, 다른 일부는 닫힌 자세로 자신들의 공동체에 몰입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공동체나 민족 또는 종교 집단 내부에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출신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를 간직한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immigrant enclaves), 즉 ‘문화적 게토’를 형성한다. 문화적 게토 중 어떤 것은 오래가지만, 다른 어떤 것은 잠시 만들어졌다가 이내 사라진다. 그것들은 형성되고 변모하며,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주민이 문화적 게토를 형성하여 주류 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특히,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게토는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 경기 안산·시흥, 서울 영등포·구로·금천 등에는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 일부에서 폐쇄적인 문화적 게토가 생겨났다.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문화갈등의 씨앗이 국내에도 뿌려져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개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2000년대 초 법·정책 개념으로 도입되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일상 용어로 확산되었다. ‘다문화’ 개념은 출신국, 체류 자격, 민족, 인종 등을 따지지 않고, 내국인과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 폭넓게 규정한 점에서 언중(言衆)의 마음을 얻었다.

한국 공론장에서 사용되는 다문화 개념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 용례를 지닌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 가족을 지칭하는 ‘다문화가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 출신 배우자 또는 그 자녀만 가리키는 용어로 변질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부부 또는 그 자녀를 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에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언중은

그들을 ‘다문화’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호명한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 저개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들은 자신이 ‘다문화’라고 호명되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곤 한다. 타인이 어떤 개인을 언급하는 지칭이나 호칭은 그의 ‘사회적 정체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문화’ 개념이 오용될 경우, 그 집단 소속원을 주류 사회 성원과 구분하고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공론장에서 ‘다문화’ 개념은 이민 또는 이주민 사회 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홈페이지 게시글은 “프랑스 다문화(이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민 정책과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을 설명하면서, 프랑스가 ‘공화주의’(republicanism)로 불리는 동화 정책(assimilation policy)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동화 정책과 구분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이 글의 제목은 혼란을 야기한다. 다문화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개념의 혼란은 국내 언론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초고령 사회와 다문화사회

인구 고령화와 내국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주민을 수용하여 공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주류 사회와 이주민이 서로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포용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당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문화 다양성이 번영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다문화정책 현황과 과제 : 미국 이민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들어가며

세계 각국은 '새로운 국제이주의 시대'(Massey, 2020)에 대응하여 이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국제이주의 근본적 원인, 특히 국가별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을 깊이 이해하는 연구,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목표와 구체적 개입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적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한 많은 국가들은 국제이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국익을 증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몇 배 높은지)과 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5분위배율은 2024년 기준으로 각각 5.72배, 128.66배(통계청, 2023)에 달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응으로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초저출산의 지속,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약 1,690만 명에 달하는 1·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출생)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라는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이재호, 강영관, 조윤해, 2024).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과 인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더 나아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다문화, 이민,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고, 기존 다문화정책에 대한 성찰적 고민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정책을 성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구적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다문화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인 OECD 기준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이 총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이를 다

문화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정현주, 2020). 2024년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총인구 대비 5.2%(약 265만 명)에 달하고(법무부, 2024),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은 인구적으로 이미 다문화사회화 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18만 명(법무부, 2024)이고, 이 중 약 80%인 14만 4천 명이 결혼이주여성으로 추산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수요를 내국인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이규용 외, 2015, 2024).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사회는 머지않아 체류외국인이 총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안연한 다문화사회'(정현주, 2020)가 될 가능성도 크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지난 20년간 시행해 온 다문화정책이 형해화(形骸化)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정책은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기본대책'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양경은, 노법래, 2020).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이 제정되었고, 1차(2010년), 2차(2013년), 3차(2018년), 4차(2023년)에 걸쳐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양경은, 노법래, 2020)되는 등 한국 다문화정책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사회권적 시민권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김규찬, 2024; 정장엽, 정순관, 2014; 정현주, 2020)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다문화정책 논의가 미성숙하고 답보 상태에 놓인 이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그 공통된 지적은 ①철학적 가치기반의 미약함과 ②정책실천을 위한 공동체적 합의의 부재이다. 첫째, 철학적 가치기반의 부재 측면에서 한국 다문화정책은 권리지향적 '차별시정'(김선희, 전영평, 2008)이 아닌 권리지향적 '동화주의'(정장엽, 정순관, 2014)와 '자문화중심적 도구주의'(서덕희, 2013)에 바탕을 두고 있다. 권리지향적 관점은 다문화정책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킴으로써 '가족주의적 정서'를 보전하고, 국내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본다. 즉,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협소한 의미의 '가족유지적 인구관리정책'(김선희, 전영평, 2008)으로 정립되어 왔다. 이는 저출산정책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인구정책으로 포장된 사회정책의 양가적 성격'(국회연구조정협의회, 2023)과도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관리지향적 접근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이민자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중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비난회피 전략'(양경은, 노법래, 2020)으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 다문화정책이 '가족유지와 인구관리'(양경은, 노법래, 2020)라는 제한된 기능적 목적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정책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미국의 이민정책 사례가 주는 함의와 통찰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다문화정책의 현황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



기에 앞서, 먼저 다문화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라고 하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개념과 '정책'이라는 추상성이 강한 개념이 결합된 만큼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선행연구(김미나, 2009; 김정선, 2011; 남기범, 2015; 양경은, 노법래, 2020; 윤인진, 2019; 심승우, 2022)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문화정책은 학술적 측면에서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정책-실천적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으로 분류되는 정책들의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액 결정과 같은 문제가 정책담당자의 의지와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행연구의 논의로부터 도출된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은 협의적 의미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양경은, 노법래, 2020)으로 정의된다. 다문화가족은 한국국적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김정선, 2011)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정책은 광

의적 의미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전체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길강목, 2011; 김규찬, 2024)으로 정의된다. 광의의 다문화정책은 이민과 난민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보면,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발전해 왔다(양경은, 노법래, 2020).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기본대책' 수립,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이후 정부는 5년 단위의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자녀 교육 지원, 취업 연계와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김선숙, 조소연, 진재찬, 2024).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선숙 외, 2024).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가 유지되어 이주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체류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김정선, 2011; 양경은, 노법래,

2020; 정현주, 2020). 따라서 한국 다문화정책은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목표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한국 다문화정책 재편을 위한 과제는 4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대상의 차원에서 협소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김준식, 안광현, 2012; 양경은, 노법래, 2020).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탈피한 포괄적·권리지향적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관점의 차원에서 동화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김규찬, 2024; 심승우, 2022). 현재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을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책지원의 차원에서 교육, 의료, 노동시장 접근성에서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법적·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정현주,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손인서, 2023).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다문화 시민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4가지 차원에서 한국 다문화정책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미국 이민정책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통찰은 무엇인가?

먼저 인구적 측면에서 미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7일 기준 미국의 총인구는 3억 4,114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 약 81억 명의 4.20%를 차지한다(U.S. Census, 2025). 미국 내 외국출생자(foreign-born population) 수는 2024년 기준 총인구의 15.6%에 해당하는 5,160만 명이고(Camarota & Zeigler, 2024),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면, 49%는 시민권자, 19%는 영주권자, 5%는 유학생, 취업, 외교 또는 기타 임시비자 체류자이고, 나머지 27%(1,370만 명)은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으로 추정된다(Hook, 2025). 이를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총인구 대비 5.2%(법무부, 2024)인 반면,

미국은 15.6%로 약 3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전체 체류외국인의 16.9%(성도현, 2024)인 반면, 미국은 27%로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 비교를 통해 미국은 한국보다 더 높은 체류외국인 거주 비율과 미등록 이주민 비율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포괄적·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요구되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역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 이민정책은 크게 세 시기, ①규제적 이민정책(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②포용적 이민정책(1940년대 초반~1980년대 후반), ③새로운 시도 또는 교착적 이민정책(1990년 초반~현재)으로 구분된다(김태근, 2017; Baxter & Nowrasteh, 2022). 첫째, 규제적 이민정책 시기에는 1882년 이민법, 1882년 중국인배제법, 1924년 이민법이 제정되었다(김태근, 2017). 이러한 법령은 '이민배척주의'와 '인종주의'가 결합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미국 사회의 주류 가치인 백인-청교도 중심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다. 둘째, 포용적 이민정책 시기에는 1943년 이민법, 1952년 이민과 국적법, 1965년 이민과 국적법, 1986년 이민개혁과 통제법이



제정되었다(김태근, 2017). 이 시기의 법제화는 인종에 따른 차별적 이민정책을 철폐하고, 이민자의 가족 재통합과 전문기술인력 유치 촉진이 목표였다. 현재 미국 이민정책의 기본골격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김태근, 2017). 셋째, 새로운 시도 또는 교착적 이민정책 시기에는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치며 이민정책 변화가 소강상태(김태근, 2017)를 보였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4년 11월 '불법이민자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DAPA)'라고 불리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제13672호)이 제정되는 변화가 있었다(김현희, 2019). 반면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는 2017년 2월 '무슬림 금지(Muslim Ban)'라 불리는 반이민 행정명령(제13769호)이 제정되었다(김영준, 2017). 두 행정명령은 정책기조의 차이가 극명하다. 오바마 행정명령의 목적은 약 40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지만(김현희, 2019), 트럼프 행정명령의 목적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것이었다(김영준, 2017).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이민정책의 축소, 확대, 그리고 교착 상태는 특정 시기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화해 왔음(김태근, 2017)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정당이 대통령직과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주요 법안의 통과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졌고(이종근, 2019), 이로 인해 이민 개혁 입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의회의 협력을 얻지 못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친이민 또는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정책기조 널뛰기 현상'을 초래했다(김현희, 2019).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2016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2017년 2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었다(김태근, 2017; 류기황, 2020). 이러한 사례는 다문화, 이민, 난민정책에서 급진적 개혁이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자의 나라로서 다양한 출신국의 이주민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민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김영준, 2024). 미국의 이민정책은 단순한 이민자 유입을 넘어, 가족 재결합, 노동시장 충원, 인도적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 이민정책은 ①가족이민, ②취업이민, ③난민·망명자 보호로 구성되며,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김태근, 2017). 첫째,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가족 중심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 중에서 미국은 가족이민에 중점을 두는 대표적 국가이다(이창원, 2017). 둘째, 취업이민은 고급기술인력부터 비숙련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의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노동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남부현, 박민희, 2023). 또한 미국의 취업이민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잠재적 기능으로서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한다(Massey & Pren, 2012). 즉, 미국 취업이민정책은 농업, 건설업과 같은 산업에 저임금의 유연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해왔

다(Krugman, 2024). 셋째, 난민과 망명자 보호정책으로 난민수용프로그램(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이 있다(Kerwin & Nicholson, 2021). 이 프로그램(USRAP)은 1980년 제정된 난민법(Refugee Act of 1980)에 근거하고, 연방정부, 국제기구, NGO가 협력해 난민을 심사하고 수용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Bruno, 2012, 2018). 또한 연간 난민 수용 한도(presidential determination)는 미국 대통령이 매년 결정하는데, 2025년은 최대 12만 5천 명까지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한다(The White House, 2024).

복지적 관점에서 미국 이민정책의 장점(남부현, 박민희, 2023; 류기황, 2020; 최서희, 2024)은 첫째, 이민정책의 대상포괄성이 높다. 미국은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직종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고용 기반의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이민정책의 관점이 다문화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언어 서비스와 문화적 고려를 정책에 반영한다. 셋째, 이민정책의 초점이 이민자의 권리 보장에 있다. 미국은 시민권과 영주권 취득 절차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서 3가지 주요분야인 국경안보, 불법이민자, 이민혜택에서 개혁에 대한 다수 여론의 비판과 그로 인한 개혁 실패(김영준, 2024),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량추방(mass deportation)'이라는 보수적 이민정책의 재등장(Oliphant & Copeland, 2025)으로 볼 때, 향후 미국 이민정책의 폐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김영준, 2024). 폐쇄적 이민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 이민정책이 한국 다문화정책의 재편에 주는 함의는 첫째, 이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



다는 점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주의적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같이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 공공서비스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셋째, 법적·제도적 개선이 실질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강화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지역 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이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성숙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다문화정책이 미국의 이민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이민정책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참고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개혁방향과 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한국 다문화정책의 과제

한국사회는 심각한 불평등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더불어 다문화, 이민,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사회는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보다 실효적인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을 혁신하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협의적 개념의 다문화가족을 중심에 두고 이주민의 삶과 복지에 대한 동화주의적·도구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 다루어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조선족고려인 동포,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집단을 포괄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권 보장과 실질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주민 집단에 대한 정책의 포괄성(대상 확대)과 지원의 관대성(실질적 보장)을 동시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다문화정책은 정치철학적인 차원에서 '관리지향적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아닌 '권리지향적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핵심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당구공 모델'(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을 넘어 '완전주의적 모델'(사회적 권력관계와 구조적 불평등을 문제로 삼고 이를 변화시키는 방식)로 실천되어야 한다(심승우, 2022).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인종주의'나 '관용(플레랑스)'과 같이 차이와 다양성이 단순히 병립하고 공존하는 수준을 넘어, 이방인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적극 경청되는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심승우, 2022).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고민하는 정책실천가들은 미국 이민정책 사례에서 배울 점과 경계해야 할 점을 신중히 선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다문화정책이 껌대기뿐인 수사적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통합 전략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을 포함한 이민·난민정책 전반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2023).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길강목. (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4(2), 139-168.
- 김구찬. (2024).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서의 한국 이민정책 비판: 한국이민정책학보, 7(2), 59-81.
- 김미나. (2009).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행정논총, 47(4), 193-223.
- 김선숙, 조소연, 진재찬. (2024). 한국의 다문화정책,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C시 가족센터 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 14(2), 1-29.
- 김선희, 전영평. (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행정논총, 46(4), 305-330.
- 김영준. (2017).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 이슈브리핑, 17-11, 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영준. (2024). 미국의 이민 정책: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비교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9(2), 27-49.
-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사회, 92, 205-246.
- 김준식, 안광현. (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연구, 12(4), 127-150.
- 김태근. (2017).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1, 93-97.
- 김현희. (2019).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서: 미국 이민법제의 변동과 한인 미등록 청년의 삶. 비교문화연구, 25(1), 95-135.
- 남기범. (2015). 한국의 다문화정책 연구의 특성: 이민정책 연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4), 165-183.
- 남부현, 박민희. (2023). 미국의 이민·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6(2), 1-28.
- 류기향. (2020). 글로벌 이주현황과 주요국의 이민정책. 한국법제연구원. <https://repository.klri.re.kr/bitstream/2017.oak/9731/1/17983k.pdf>
- 법무부. (2024). 출입국 통계: 체류외국인.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서덕희. (2013). 문화의 차원에 비추어 본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의 특수성. 아세아연구, 56(1), 7-40.
- 성도현. (2024.01.16.). 국내 외국인 251만 명...전체 인구 4.9%로 '다문화사회' 목전. 연합뉴스.
- 손인서. (2023). 개념의 빈곤, 불충분한 측정: 국내 이주민 차별경험 척도의 재검토. 비판사회정책, 78, 153-178.
- 심승우. (2022).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 통일과 평화, 14(2), 347-386.
- 양경은, 노병래. (2020). 한국 다문화 담론 구조와 그 시계열적 변동-연론 기사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3), 33-58.
- 이규용, 김기선,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2015-06.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이상돈, 김은선, 고영선, 채단비, ... 박철성. (2024).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02-01.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호, 강영관, 조윤해. (2024).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 이슈노트, 2024-17, 1-14.
- 이종근. (2019). [미국미래 2030]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4)-미국의 행정부 및 행정부-의회 관계와 미국의 미래. EAI 워킹페이퍼, 1-14.
- 이창원. (2017).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1, 67-81.
- 정장엽, 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 정현주. (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3), 567-585.

- 최서리. (2024).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영주이민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제언. 이슈브리프 2024-03, 1-11. 이민정책연구원.
- 통계청. (2023).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40300&bid=215&act=view&list_no=42836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상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CA0510N

- Baxter, A. M., & Nowrasteh, A. (2022). Brief history of US immigration policy from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day. Cato Institute.
- Bruno, A. (2012). Refugee admissions and resettlement policy.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Bruno, A. (2018). Refugee admissions and resettlement policy (updated). Current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exico, 20(1), 5-25.
- Camarota, S., & Zeigler, K. (2024, May 13). Foreign-born population grew by 5.1 million in the last two years.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https://cis.org/Report/ForeignBorn-Population-Grew-51-Million-Last-Two-Years>
- Hook, J. V. (2025, February 6). Analysis: Who are the immigrants who come to the U.S.? Here's the data. PBS NewsHour. <https://www.pbs.org/newshour/nation/analysis-who-are-the-immigrants-who-come-to-the-u-s-heres-the-data>
- Kerwin, D., & Nicholson, M. (2021). Charting a course to rebuild and strengthen the 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Refugee Resettlement Survey: 2020. Journal o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9(1), 1-30.
- Krugman, P. (2024, March 19). Are immigrants the secret to America's economic success? NYTimes. <https://www.nytimes.com/2024/03/19/opinion/immigration-us-economy.html>
- Massey, D. S. (2020). Immigration policy mismatches and counterproductive outcomes: Unauthorized migration to the US in two eras.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8(1), 21.
- Massey, D. S., & Pren, K. A. (2012). Unintended consequences of US immigration policy: Explaining the post-1965 surge from Latin Americ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8(1), 1-29.
- Oliphant, J. B., & Copeland, J. (2025, February 7). What Americans think about Trump's immigration actions early in his second term.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5/02/07/what-americans-think-about-trumps-immigration-actions-early-in-his-second-term/>
- The White House. (2024, September 30). Presidential determination on refugee admissions for fiscal year 2025. Federal Register, 89(202), 83767-83768. <https://www.federalregister.gov/>
- U.S. Census Bureau. (2025). U.S. and world poluation clock. https://www.census.gov/popclock/?intcmp=home_pop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15).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A guide for new immigrants.<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guides/M-618.pdf>

한국의 노동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령화와 외국인력 수요

최근 들어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인구구조나 출산율 추이를 볼 때 이민자 유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출산율을 높여더라도 그 효과는 한참 뒤의 일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 유입 확대는 인구나 생산, 소비 등에서 매력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생산 활동을 고려한 이민자 유입 및 활용정책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이란 한국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를 의미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취업활동을 체류자격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비자,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형 이민자로 이들의 대부분은 취업활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둘째, 취업과 연계되는 체류자격자로 여기에는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주재, 구직비자 등이 있다. 가령, 유학생의 경우 주당 30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졸업 후 1년 동안은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취업비자로 여기에는 전문인력 비자(E-1~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비자(H-2), 선원취업(E-10), 지역특화비자(F2-R) 등이 있다. 이 외에 불법취업자가 있는데 이들의 유입경로는 다양하다. 법무부 출입국통계는 체류기간 초과자를 불법체류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취업자에는 체류기간 초과자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체류자도 있다. 이 중 취업활동 체류자격은 정부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분야 및 도입규모에 대한 정책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동이민정책이 갖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분야 외국인 노동력의 확보 문제이다. 정부는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제도도 마련하였다. 향후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돌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 돌봄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더불어 돌봄분야의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인구변동에 따른 내국인 신규노동공급의 감소, 베이버 부모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따른 생산현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단순인력뿐만 아니라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에 기인한 숙련수요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중고령 숙련인력의 고령화 및 퇴장에 따른 숙련수요 부족 문제를 위해서는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일본의 특정기능 외국인력제도의 도입이나 대만의 중숙련 외국인력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숙련인력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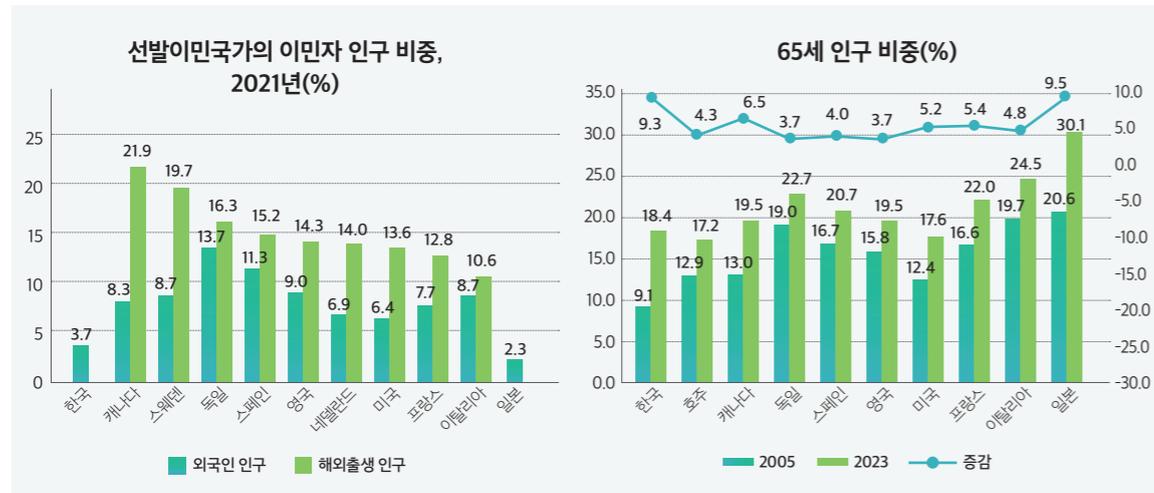
셋째,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문제는 실증적인 분석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쟁점 중의 하나는 산업안전, 노동강도,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젊은 외국인 노동력과 고령인구들의 협업, 직무배치 및 조정을 통해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고령사회 해법으로 이민정책이 유효한가?

앞에서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이민자 유입 및 활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은 고령화를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법은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유입을 통해 고령화율을 낮출 수 있다는 논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민자도 고령화된다는 점, 그리고 고령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이민자들의 유입을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고령화현상을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민자유입이 많은 선발이민국가들에서도 65세 인구 비중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

<그림 1> OECD 주요 국가들의 이민자 인구 비중과 고령화율



주) 외국인 인구는 외국국적 인구를 의미하며 해외출생인구는 목적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로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를 포함한다.
 자료: OECD, 이규용 외(2024), 인구 변동과 노동이민정책,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표를 이용하여 작성

<표 1> 연령계층별 인구 비중(2022년)

(단위: %)

	15세 이상	청년층 (25~34세)	여성 (25~39세)	고령자 (55~64세)	65세 이상
전국	100.0	15.4	10.9	18.3	20.2
서울	100.0	19.0	13.8	16.8	19.4
인천경기	100.0	16.1	11.5	18.0	17.0
광역시	100.0	15.1	10.6	18.5	20.3
10만 명 이상	100.0	14.2	9.9	18.4	19.6
5만~10만 명 미만	100.0	10.3	6.8	20.3	30.8
5만 명 미만	100.0	7.8	5.2	22.6	38.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22년 하반기 자료), 이규용 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에서 인용

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고령화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화율이 높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본 인구규모별 연령구조를 보면 생산가능인구 10만 명 이하의 지역의 경우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은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 비중이 61.3%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38.7%이다. 생산가능인구 5~10만 명 이하 지역은 5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1.1%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30.8%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중 하나가 일자리 기회와 일자리의 격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임금격차가 크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임금격차는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거래비용이 낮은 청년층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기초지역의 높은 고령자 비중은 비수도권 기초지역의 고령자의 안전망 문제, 그리고 소비지출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선주민의 인구유출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민자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민자도 선주민과 유사한 지리적 분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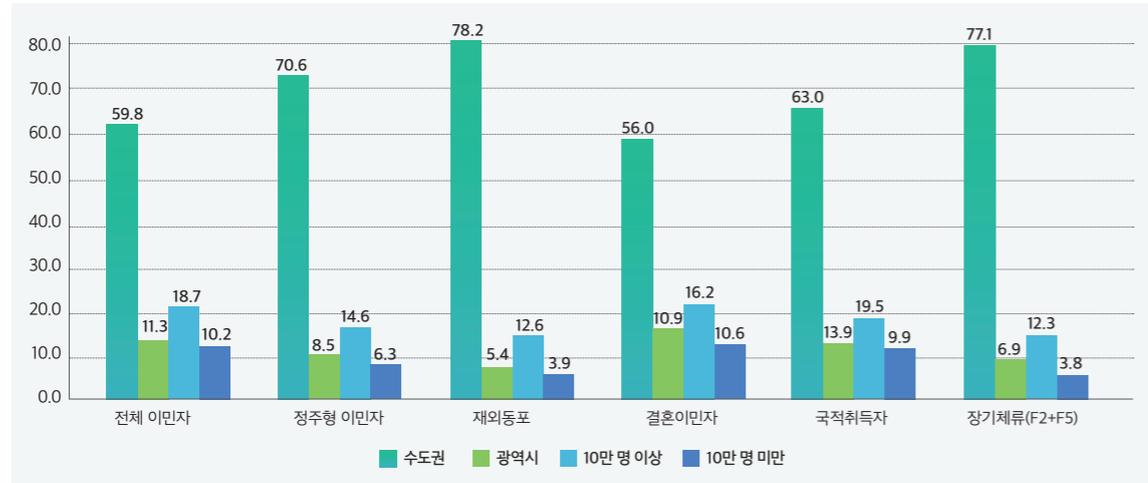
<표 2> 지역유형별 이민자 변화(전체 및 정주형 이민자)

(단위: %)

	전체			정주형 이민자		
	2010	2021	증감	2010	2021	증감
전국	100.0	100.0		100.0	100.0	
서울	29.5	20.0	-9.5	31.2	24.7	-6.5
인천경기	35.2	39.8	4.6	32.4	45.9	13.5
광역시	10.8	11.3	0.5	11.7	8.5	-3.3
시군-10만 이상	15.3	18.7	3.4	14.2	14.6	0.3
시군-5만~10만	5.4	6.3	0.8	5.3	4.0	-1.3
시군-5만 미만	3.7	3.9	0.2	5.1	2.3	-2.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규용 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에서 인용

<그림 2> 정주형 이민자의 지역별 거주 비중(2021년 기준, 전체=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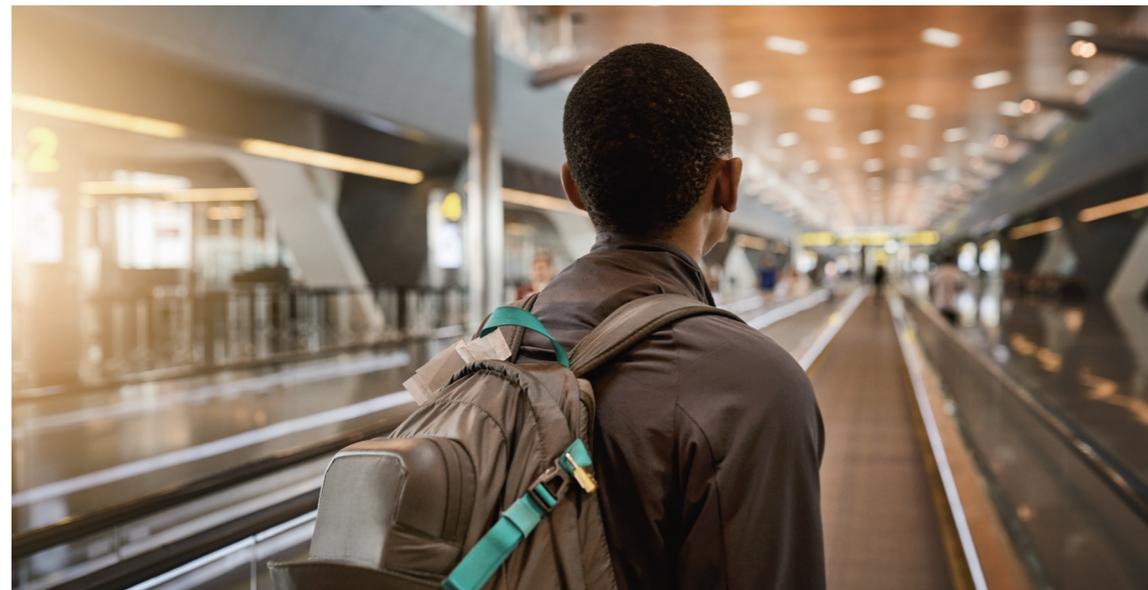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규용 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에서 인용

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선주민과 비교 시 어떠한가? <표 2>는 이민자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2010년과 2021년 두 시점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정주형 이민자가 전체 이민자 집단보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10만 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주형 이민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기초시군구 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이 정주형 이민자에게도 투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주형 이민자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21년 기준 정주형 이민자의 70.6%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재외동포는 78.2%, 국적취득자는 63.0%, 장기체류자(F2+F5)의



77.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정주형 이민자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노동이민정책 과제

이민정책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번 선택한 정책 결과는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영향이 중장기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유입 및 활용정책은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선제적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 유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변화나 기술혁신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민자 수요와 중장기 수요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단기, 중장기적인 이민자 수요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주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기순환형 이민자 유입정책과 정주형 이민정책이라는 틀을 견지하며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초기에는 노동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인력이 다수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체류자격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가족결합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미 우리 사회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결합을 통해 정주하는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기존의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주로 유입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사회통합 정책도 한국사회 적응지원이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선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의 정비 및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이민자 통합정책을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기여도,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 의지, 한국사회 구성원과의 밀접 접촉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합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층 유출



문제, 지방소멸 문제는 한국사회가 갖는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격차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이중구조의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이민자 수요가 증가하여 왔으며 상당수 이민자들이 격차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문제가 이민자들에게도 투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 유입이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이민정책의 성공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에 달려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규용 외(2023).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 도전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24). 「인구변동과 노동이민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24).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민자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를 새로운 정주 인구로 받아들이고 노동력 공급과 지역활성화의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민자 증가와 함께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가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특징, 사회통합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과 특징: 사회통합 대상의 변화

2024년 12월 기준, 국내체류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외

<그림 1> 국내 체류외국인 규모 추이(2014~2024) (단위: 만 명)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4년 12월호)

<표 1> 주요 체류자격별 비율

구분	장기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단순노무/단순기능**
2006년	660,607	14.2%	4.6%	3.7%	44.9%
2024년 12월	2,042,017	8.9%	12.9%	4.4%	23.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2005년, 2024년 12월)

*전문인력: 20056: E-6(예술·홍행)을 제외한 E-1 내지 E-7 / 2024년: C-4, E-1~E-7

**단순노무: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 도입인력, 단순기능인력: E-8~E-10, H2, H1

국인이 200만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사회통합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체류외국인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내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대표적이었으며¹⁾, 20년 전인 2006년만 하더라도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전체 장기체류외국인의 14.2% 수준이었다. 또한 대규모 단순노무인력은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집단이었기에 사회통합 지원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정책 차원에서 유학생과 전문인력 유치를 강화하

며, 이들의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집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체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단기 순환 원칙이 적용되었던 비전문인력 역시 정주 기회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일부 유형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제공되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한 이민자가 통합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이민자 지원 현황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신규 이민자가 수용국

<표 2>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일부)

구분	세부과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 정책 체계화	①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	· 사회통합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② 유입과 통합을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체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① 상호 소통기회 확대 및 다양화	·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②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 ·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①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	·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
	②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	·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③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	·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① 경제적 자립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	·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②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	·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③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차세대 동포 육성	·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동포 청소년 민족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1)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의 사회구조에 편입되는 과정이자(Alba, et al., 1997), 이민자를 더 이상 외부자(outsiders)로 간주하지 않고 선주민과 동일하게 신뢰하며 협력하는 상태(Laurentsyeva & Venturini, 2017)를 의미한다. 이에 사회통합 정책은 내국인과 이민자 간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행된다.

이민자의 정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명시된 '사회통합'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 이해 증진, 이민자의 역량 강화, 기초생활 지원 및 성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지원, 상호 교류 및 유대감 증진, 그리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즉, 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복지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및 헌법 가치 등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외국인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야간·주말·온라인 교육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민자 지원과 사회통합 정책의 과제

한국 사회에 장기 체류하며 정착하려는 이민자가 증가하고, 구성의 다양성도 높아지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확보와 고령화되는 동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이민자 지원에 있어 부처 간 유기적 연계와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전달하는 대표적인 부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이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체류외국인 전반에 대한 사회통합을 담당하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별도 조례에 근거하여 부서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도 하였다.³⁾

그러나 여전히 지역의 이민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

<그림 2> 사회통합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일부)



2)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참고(www.socinet.go.kr, 검색일: 2025.3.9.)

3) 외국인공동체과(경상북도 '23년), 외국인정책추진단(충청북도, '24년), 이민사회국(경기도, '24년) 등이 신설되었다.

<표 3> 등록외국인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비율	4.5%	4.8%	31.4%	28.6%	14.6%	10.6%	5.4%

출처: 법무부. 등록외국인(지역, 연령) 현황(2024.12. 기준)

<표 4>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비율	0.9%	2.9%	5.8%	16.1%	15.4%	18.7%	40.2%

출처: 법무부.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현황(2024.12. 기준)

태의 행정체계를 고수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 가령 지역 내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임에도 이민자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 정책이 설계된 탓에 다른 이민자 집단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이민자(예: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서도 일부 대상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관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의 수요에 맞는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체류 동포의 고령화에 대한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등록외국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⁴⁾, 20대가 31.4%, 30대가 28.6%로 2-30대 비율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젊고 건강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반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40.2%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장기체류 외국인 중 거소신고자의 비율이 27.1%이고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장기간 정주한다. 향후 은퇴연령을 넘기는 동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치며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기초적인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는 협력하여 당면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법무부 홈페이지(https://moj.go.kr).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https://www.socinet.go.kr).
- Alba, Richard, & Nee, Victor. (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4): 826-874.
- Laurentsyeva, N., & Venturini, A. (2017).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 role of policy-A literature review. Intereconomics, 52(5), 285-292.

4) 등록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법무부에 체류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다문화지원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강혜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부 부장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다문화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346,017가구이며, 결혼이민자¹⁾ 가구가 82.4%(285,005가구), 기타귀화자²⁾ 가구가 17.6%(61,012가구)이다. 평균 가구원 수는 2.82명이고 평균 자녀 수는 0.88명이며, 무자녀가구가 42.0%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만 5세 이하의 한국어 지도(26.8%), 만 6세 이상은 학습 지도(50.4%)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 생활에서 주된 어려움은 언어문제(22.9%), 경제적 어려움(21.0%), 외로움(19.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2.6.18. 보도자료). 이러한 다문화가구의 적응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다문화가정 및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다문화가구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지도 또는 학습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표현, 수용, 화용 언어능력을 촉진하고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다문화 지원사업의 질적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① 가정 및 다문화시설 내 아이돌봄 지원, ② 일자리 연계, ③ 언어발달 촉진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① 아이돌봄 지원: 동산노인복지관 ‘가정아이돌보미 사업’

동산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안산시 는 수도권 핵심 공업 지역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등록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안산시 전체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다문화학생이나 유아는 해마다 최소 337명에서 최대 59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와 학업 문제 등은 다문화가정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에게는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1) 결혼이민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 국적자 및 혼인귀화자
2) 기타귀화자: 혼인귀화 외의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그림 1〉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의 만 6세 이상 자녀 양육 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주: “학습 지도/학업관리 어려움”은 '21년 신규, 복수응답(1+2순위)

이는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안산시의 지역 현안으로 등장했다. 동산노인복지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가정에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돌봄 공백을 더욱 키운 것은 코로나19였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부 활동에도 제약이 걸렸다. 특히 다문화가정 의 경우 부모가 한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더더욱 절실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실에 공감한 어르신들이 기꺼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다문화가정의 든든한 친정엄마이자 맞벌이 가정을 지켜주는 조부모가 돼주기로 한 것이다.

참여자 어르신은 활동과정에서 연 12시간 이상 전문강사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의 돌봄서비스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미리 학습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의기투합에 지자체도 힘을 보탤다. 주민센터와 건강지원센터, 안산보육정보센터가 협력해 수요자 가정 근처의 참여자를 발굴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했다. 덕분에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증가해 신규 수요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동산노인복지관의 가정아이돌보미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등록외국인이 최다인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돌봄 채움 서비스이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하며 정서적인 지원까지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외국인가정이 많은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국가적 현안인 고령화를 모두 살피는 가정아이돌보미 사업은 현

〈그림 2〉 다문화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단위: 명)



출처: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동산노인복지관 '가정아이돌보미 사업' 활동 모습

실에 맞닿은 선한 행정력의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다(한국 노인인력개발원, 2022).

② 일자리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다문화이음일자리'

인천광역시 다문화 결혼이민여성 인구는 2022년 기준 9,392명으로, 다문화 혼인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늘면서 지역 내 일자리로의 유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문화 이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은 단순노무 및 일용근로 형태의 단기 일자리로의 알선이 우선되고 있고, 취업 후 별도의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일회성으로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일자리와 이주민들을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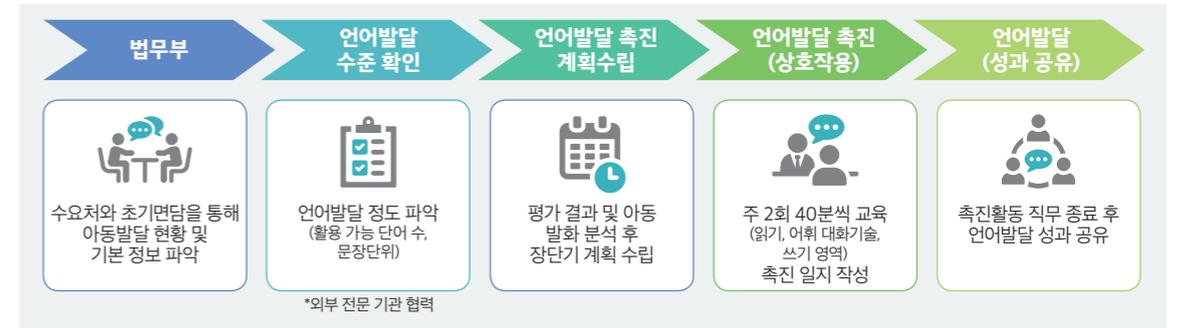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지역 내 가족센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기관 내에 노인을 직업상담사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노인과 다문화여성 간 1:1 컨설팅을 통해 진로탐색, 이력서 작성 컨설팅, 일자리정보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고용시장에 대한 이해 및 직장 내 근무예절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사업 결과, 사업기간 4개월 동안 6개 수요처, 10명의 노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다문화이음일자리' 참여 노인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홈페이지(<http://www.wwp.or.kr>).

<그림 3> 시니어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 시범사업 프로세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인일자리 참여자, 55명의 수혜자에게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③ 언어발달 촉진 지원: 광주 북구·광산구·동구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언어발달 지연문제가 부상됨에 따라 이 문제를 노인일 자리를 통해 완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취학률(40.5%)이 국민 전체 평균보다 31% 낮은 상황이었으며,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언어발달 지연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학습 부진, 자존감 저하, 사회 부적응 등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시행하나 높은 수요로 인한 대기자 급증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을 이용하기에는 부모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대상으로 노인일 자리를 활용해 언어 촉진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유아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수혜 아동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책 읽기, 상징놀이 등을 통해 표현언어·수용언어·화용언어 발달 촉진을 위한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언어표현 지도, 정서발달 지원 등을 통해 언어발달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직무를 수행한

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2024).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다문화센터, 가족센터 및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확대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구를 보면 이미 다양한 인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299,241가구에 해당하던 다문화가구 수는 2022년까지 7년 사이에 10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센터, 다문화센터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노인일 자리는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일자리 연계, 언어발달 촉진 지원 등 노인일 자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체계화하고도화하여 다문화가정과 노인이 윈윈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6.28.). 다문화가족 자녀의 43.9%가 청소년...학령기 맞춤형 지원 필요성 커져 -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홈페이지(<http://www.wwp.or.kr>), 2024년 「다문화이음일자리」 해단식 사진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2).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우수 사례집.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다문화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일 자리를 위하여!



이은옥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사업팀장



“바나나 주세요!”

4살의 보통 아이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한마디일 수 있지만,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아이에게는 그 자체로 감동적인 순간이다.

처음에 만났을 때 현규는 눈맞춤도 없고 표정, 표현도 없는 외마디 소리만 내던 아이였다. 힘들다면 다른 수혜 아동을 찾아보자는 권유에도 사업 참여 어르신은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말씀하였다. 시간이 지나 라포가 형성된 후, 떼쓰고 울던 아이가 참여자의 목을 휘감고 정서적 지지대를 삼아 장난감을 빼앗아 오는 모습으로 변했다. 눈맞춤도 잘되고 ‘정리하자’, ‘주세요’와 같은 간단한 지시어도 잘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업종료일 하루 전에 “바나나 주세요”라고 특내뻔했고, 그 순간 참여자 어르신은 박사님이 되어 있는 먼 미래의 현규를 꿈꾼다.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4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비율은 2015년 이후 매해 증가하여 2020년 6%를 기록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초기에는 한국어 사용, 사회 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된 문제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과 교육문제가 더 큰 어려움으로 대두된다. 자녀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여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기 한글 학습과 사회화의 주된 교육자인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수록

〈표 1〉 광주광역시 다문화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다문화인구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자녀	기타동거인
광주광역시	25,903	3,504	7,610	7,677	7,112
북구	7,167	1,000	1,972	2,189	2,006

출처: 행정안전부(2023).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학교 부적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광주광역시 다문화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5,903명이다. 이 중 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7,167명으로 27.7%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71.5%)보다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부모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되면 학습 부진, 자존감 저하, 사회부적응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24년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돕기 위한 '시니어 다문화 언어발달 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 2회(회당 40분) 언어치료 및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가 많아 최대 2년까지 대기해야 하며, 서비스는 센터 방문자에게 우선 지원되고 출장 지원은 제한적(1개 시설, 2명 이상 신청)이다. 이로 인해 일부는 서비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들을 발굴하고 복지관이나 가족센터에 잘 연계해 주자는 취지였기에, 수혜자를 찾는 일이 쉬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지역 아동센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많은 기관이 신청의사를 보였으나, 대상을 유아로 좁히니 관심을 보인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후 어린이집협회를 통해 홍보를 시작하고 원하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공략하여 홍보한 결과 9곳의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동의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가 보육의 흐름을 끊지 않고, 수요처의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코로나 마스크 세대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지체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유아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요조사 결과, 북구에는 생각보다 다문화가정 유아가 많지 않았고, 전남대학교 주변 어린이집은 오히려 외국인가정이 더 많았다. 결국, 당초 의도에서 조금 더 수혜자 범위를 확장하여 다문화와 외국인가정을 포함하였고, 14명의 수혜아동을 6명의 일자리 참여자가 맡게 되었다.

다양한 유아들의 언어 발달: 문제 행동을 넘어선 성장

수혜 아동들의 상황은 아주 다양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현규 사례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은 복합 장애(ADHD, 경계성 지능장애 등)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였다. 이 아동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참여 어른신이 밀착하여 교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교사의 구역을 침범하는 점령자 취급이 참여자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고, 수혜 아동과의 라포형성 시간은 참여자의 성격과 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아이에게 진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결과, 서너 달의 힘든 시간 끝에 결국 “바나나 주세요”라는 말로 보답받았다. 담임교사는 ‘선생님이 꼭 필요해요’라며 출근하지 않은 날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지움이는 부산스럽고 가끔 쓰레기통을 엮고 입에 더러운 것을 넣는 행동을 해서 참여자를 당황하게 하였다. 원장님은 아이를 위해 연장반에서 단독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참여자는 1:1 돌봄을 통해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참여자가 문제 행동을 감당하기엔 벅찼고, 수혜 아동을 바꿔 달라는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 지점에서는 사업담당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다. 참여자와 원장님에게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율하여, 연장반 선생님과 함께 공동으로 돌봄 육아를 진행하며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원장님은 지움이를 문제 아동이나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유아 발달 과정에서 아직 교육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은 행동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관점은 참여자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결국 원장님은 “다음에도 꼭 부탁 드립니다. 어른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1:1 집중 케어로 이룬 유아 언어 발달의 성과

유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언어촉진 놀이법, 상호작용하는 방법, 유아 행동 이해 등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현장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에 참여했지만, 한정된 시간에 유아 발달에 따른 이해와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참여자들에게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은 힘들고 버거운 시간이었다. 기관에서는 동화구연, 교구 만들기, 영상교육 등의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의 언어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 수혜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표 2〉 시니어 언어발달 도우미 수혜 아동 언어발달(REVT) 검사 결과

(단위: 점)

수혜 아동명	평가 결과	표현 어휘력(점)			수용 어휘력(점)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곡**	점수	17	26	9	12	29	17
	발달현황	약간지체	약간지체	-	약간지체	정상	-
이**	점수	1	4	3	2	11	9
	발달현황	발달지체	발달지체	-	발달지체	발달지체	-
조**	점수	2	15	13	2	12	10
	발달현황	발달지체	발달지체	-	발달지체	발달지체	-



인사하기



감정블럭놀이



없으면 끝까지 마칠 수 없는 사업이다.

모친이 캄보디아 출신인 4살 유빈이는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좋은 아이다. 사업 초기에는 알 수 없는 언어나 영어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두 낱말 조합 정도의 문장을 표현하는 아이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소극적이고, 또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못하였다. 사업 기간 동안 참여자는 1시간 이상 아이를 1:1로 집중 케어하며 동화책을 읽어 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블럭놀이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언어발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유빈이는 다섯 단어 조합의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놀이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하며 말이 많아졌다.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혼자 노는 시간은 줄고, 어울려 놀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유빈이 엄마는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었고, 사업에 대한 고마움을 연신 표현하였다.

1:1 수업은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참여자의 교안 구성과 진행 능력이 부족하다면 매우 힘들 수 있다. 1:1 수업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 광주북구가족센터에서 언어발

달 지도사가 수혜 아동의 발달수준 검사를 지원해 주었다. 그 결과는 짧은 시간이라도 1:1 수업은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유아의 발달 여정: 언어와 정서의 성장

다은이는 22개월로, 엄마는 베트남 출신이고, 아빠는 언어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유아다. 유미의 언니는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결국엔 특수 어린이집으로 옮겨졌기에, 다은이 언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가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다. 원장님은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신청하셨고, “이런 사업이 일찍이 있었더라면 유미 언니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하셨다. 처음 다은이는 눈맞춤 없이 지극히 단순한 반응만 보였고, 가끔 외마디 소리를 내던 아이였지만, 11월이 되자 의사표현이 분명해지고 자주 웃으며 인사도 잘하는 아이로 변했다. 언어적 발성은 약했지만, 또래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이었고 교사의 지도도 잘 따르는 긍정적인 변화와 발달을 보였으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안 되고, 아이가 어려서 힘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야말로 할머니의 수다스러움을 발휘하여 밥 먹을 때, 손 씻을 때, 까꿍 놀이할 때 한국어를 남발하여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이었다.

2024년 시범사업의 효과를 목도한 원장님들이 입소문을 내어주고, 어린이집협회를 통해 열심히 홍보한 결과, 2025년도에는 41곳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 신청은 80건에 달하며, 사업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시니어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이제 세상을 만난 아이와 60년 이상 세상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만나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를 통해 꽃을 피우는 귀한 사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해졌다. 또한, 사업 홍보영상도 제작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사업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며 느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는 교육이 아닌 보육의 관점에서 수혜 아동을 인내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자 선발 시 성격, 인성,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보육 차원에서 좌식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에게 유아의 시기에 맞는 발달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개발원에서 매뉴얼을 제공했지만, 이를 더 쉽게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 교사들이 사용하는 용어 차이를 고려한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참여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어린 영유아 일수록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다스럽고 친절한 할머니가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및 외

국인가정은 전출입이 잦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요처와 수혜자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5년도에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더욱 질적으로 향상되고, 정착되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이다!

“영유아와 몸으로 놀고 놀이로 말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행복하다.”

“내 것이 중요하고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것도 옳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적응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아직 무엇이 되기 이전의 흰 도화지 상태의 아가들에게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란! 타인이란! 어른이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광주북구시니어클럽 '24년도 참여자 소감

※ 본고에서 유아 이름은 가명으로 명기하였음.

참고문헌

- 최윤정, 전기택,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양계민, 최영미, 황정미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어성정책연구원.
- 행정안전부(2023).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 통계청(2020, 2024).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은 이주민을 맞을 준비가 돼 있을까?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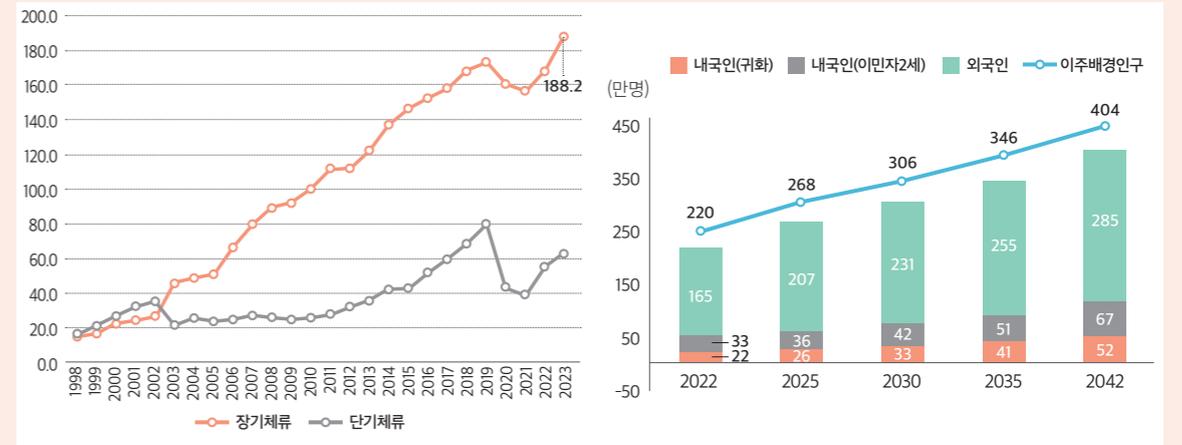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거주 이주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5)이 제공하는 체류외국인 추이를 보면, 2000년(49.1만 명) 대비 2023년 체류외국인 수는 250.8만 명으로 20여 년 사이 인구가 5배 이상 늘었다(<그림 1> 참고). 체류외국인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단기체류외국인이 장기체류외국인의 수를 능가했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추이는 역전됐다. 2000년 이후 단기체류외국인이 3.9배 증가한 사이, 장기체류외국인은 약 13배 늘었다. 2000년대 초반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 해외동포의 유입 및 정착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장기체류외국인이 188.2만 명으로 단기체류외국인(62.6만 명)의 세 배가 넘는다. 참고로, 외국인 체류에서 장기와 단기의 분류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90일 초과 체류 여부다. 장기체류 이주민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노년을 맞을 수 있는 영주형 장기체류자도 적지 않다. 이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정책의 잠재적인 대상자들이다. 이를테면, 영주자격(F-5)을 갖춘 체류외국인은 2020년 16.1만 명에서 2024년 20.4만 명으로 4년 사이에만 26%가 증가했다.

이주 인구의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주민의 유입 규모는 정책적인 결정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인구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제조업, 서비스 및 농림어업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 등의 원인 때문에 이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이주민 유입을 정책으로 막기에는 수요가 너무 많다. 통계청(2024.4.11.)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 명에서 2042년에는 404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내 인구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서, 이주배경인구의 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4.3%에서 8.1%로 늘어날 전망이다. 약 17년 뒤에는 한국의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12명



<그림 1> (왼쪽) 국내 체류외국인 인구 변동 추이 및 (오른쪽) 국내 이주배경인구의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왼쪽) 통계청(2025) 체류외국인 현황 자료 활용해서 필자가 작성, (오른쪽) 통계청(2024.4.11.), p. 3

가운데 한 명은 이주배경인구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 내국인(귀화), 내국인(이민자 2세), 외국인의 합”(통계청, 2024.4.11., p. 3)이다.

한국인의 이주민 수용성

한국 땅에서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을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로 보기 어렵다. 한국은 다양한 국적·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주민이 대거 유입된 역사를 경험한 서구에서 인종 및 민족, 종교 갈등을 겪어온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목도했다. 한국도 변화의 속도에 조응하는 인식의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한국인의 이주민 수용성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뤄졌다.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2019)는 세계가치관조사 2~6차¹⁾ 원자료를 활용해서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참고로,

세계가치관조사는 6차 조사(2010~2014년)만 보아도 약 60개국에서 8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조사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그림 3> 참고). 한국은 전체 조사 국가 평균 및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이민자이



1) 1차 조사의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한국과 다른 조사 국가의 응답 비율이 한 자리 수(한국은 3.71%, OECD 4.82%)로, 다른 차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율이 낮게 나왔다. 주유선 외(2019)에서는 이상치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서 1~6차 분석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번 글에서는 편의상 2~6차 결과만 제시한다. 참고로, 2차 조사 기간은 1990~1994년이고, 6차 조사 기간은 2010~2014년이다.

<그림 2> 이주민의 복지급여 자격 부여 시점에 대한 설문 문항

문. 귀하는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과 권리를 얻는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에 입국한 즉시
- ② 한국에서의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뒤
- ③ 한국에서 최소 1년 동안 근무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 ④ 이주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 ⑤ 이주민은 내국인과 결코 동일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 ⑥ 잘 모르겠다

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4차를 제외한 차수들에서 약 20~30% 포인트 정도 높았다.

주유선 외(2019)의 조사가 상대적으로 과거의 인식을 물었다면,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2024)은 비교적 최근 한국인의 인식을 물었다. 연구진은 유럽연합의 <European Social Survey> 8번 라운드에서 제시됐던 다음의 문항을,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동일

하게 활용했다. 이주민 대상 복지수급 제공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별 단순 비교를 위해서 해당 문항에 대한 ①~⑤ 선택지를 1~5점 척도로 활용해서 평균을 구했다(<그림 2 참고>). '⑥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환산한 평균이 높으면 그만큼 이주민 대상 복지급여 제공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평균은 3.21로, 유럽국가들의 평균(3.21)과 일치했다(<그림 3> 참고). 선택지에 따른 비율을 보면, 입국 즉시 이주민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복지수급권을 주자는 의견의 비율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3.66%), 반대로 이주민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도 한국에서 낮았다(2.66%). 후자의 선택지에 대한 유럽 지역의 평균은 9.68%로 한국의 네 배에 육박했다.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극단적 의견의 비율이 낮고, 평균 주변으로 다수의 의견이 수렴됐다. 이주민의 복지수급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유럽국가의 평균과 같다는 점이 이채롭다.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2021)는 이주

<그림 3> (왼쪽)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응답 비율 추이 (오른쪽) 이주민의 복지급여 권리 부여 시점에 대한 국가별 차이 (단위: %, 점)



자료: (왼쪽)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2019), p. 98. 그림 4-1-4 수치 활용해서 다시 그림 (오른쪽) 곽윤경 외(2024), p. 156. 그림 6-8.



민이 체감하는 한국인의 수용도를 확인한 흥미로운 연구이다. 지난 2011년 8월 시행된 설문은 이주민 1,310명을 출신지역, 체류목적,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여 유의표집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언어는 영어,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준비했다. 먼저, 이주민의 한국생활 만족도를 보면, 응답자의 67.2%가 '약간 만족한다', 25.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성별, 체류기간, 체류자격, 출신지역,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집단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한국 생활을 다른 외국인에게 추천할지에 대해서도 86.3%가 동의했다. 한국 생활을 추천한 1,310명이 꼽은 이유로는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어서'(31.1%), '외국인이 돈을 벌기 쉽기 때문'(28.4%),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기 때문'(17.2%)이었다. 한국 생활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답한 180명은 비추천의 이유로 '높은 물가'(25.6%),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25.0%), '한국인의 부정적인 태도'(20.6%) 등이었다. 흥미롭게도 추천과 비추천의 이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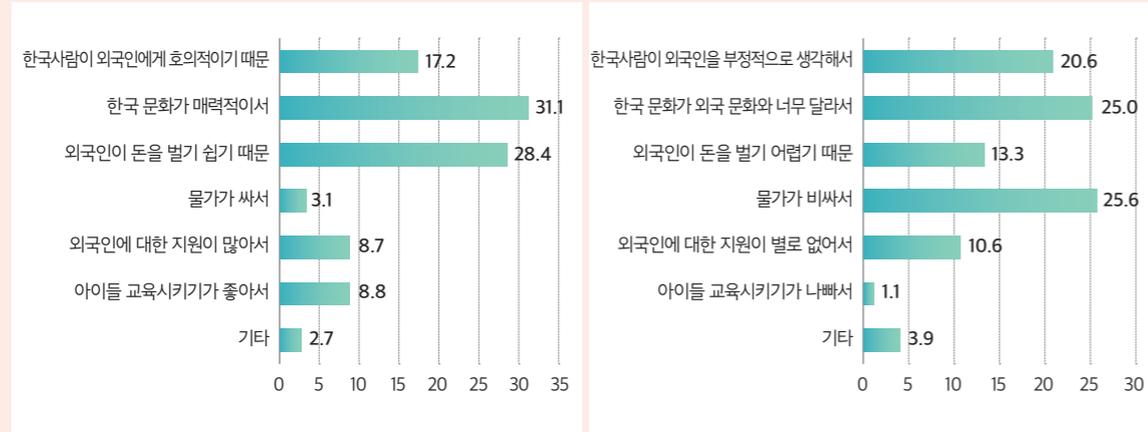
서 3순위가 모두 한국인의 태도였다.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의 이민자 현황과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서 부정적이지만, 최근 일부 긍정적인 추이도 관찰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한국의 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한국인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일부 엇갈리는 응답도 있었다.

한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국제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할 대목도 있다. 곽윤경 외(2024)는 이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이면의 배경 자체가 다른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통행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 지역을 고려하면 사실상 섬나라다. 1995년까지 한국에서 이주민 비율은 0.2%에 불과했다(김도원, 2023). 이주민에 대한 접촉 자체가 매우 낮았던 나라다. 둘째, 유입되는 이주민의 성격도 다르다. 유럽에서 이주민은

〈그림 4〉 한국 체류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추천/비추천하는 이유 (단위: %)



주: 1)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에 와서 살 것을 추천하는 경우/추천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각각 응답
 자료: 변수정 외(2021), p. 141. 그림 3-3.

흔히 난민과 연관된다. 시리아 내전과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해마다 100만 명 내외의 난민이 유럽에 유입됐다. 유럽과 한국에서 '이주민'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연상하는 이미지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복지수급과 관련하여 보자면,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도 다르다. 영미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80년 이전에도 사회지출 수준이 GDP의 20%를 넘어섰다(OECD, 2024). 넷째, 이주민 유입이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맥락도 다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팽창(enlargement)이 주요한 변수였다(Breidahl et al., 2022). 2004년 이후 유럽연합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되던 '두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Jeannet, 2020).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대규모 이주민 유입의 경험은 없었다. 다섯째,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서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김영순, 여유진(2011)은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서구에서 관찰되는 계급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실업 및 빈곤의 위험이 높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 일수록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을 찾아보지 못했다.

한국은 서구의 복지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 그리고 이주민 유입의 역사가 크게 다르다.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

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통합을 고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202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도원(2023).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본 주요국의 국제이주동향. MRTC 통계브리프. No. 2023-02. 이민정책연구원.
- 김영순, 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밀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변수정, 정희선, 김기태, 이창원, 김희주(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24.4.11.).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보도자료. 통계청.
- 통계청(2025). 체류 외국인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 Breidahl, K. N., Hedegaard, T. F., & Seibel, V. (2022). Migrants and social policy: Shifting research agendas. In Social Policy in Changing European Societies, 265-278, Edward Elgar Publishing.
- Jeannet, A. M. (2020). A threat from within? Perceptions of immigration in an enlarging European Union. Acta sociologica, 63(4), 343-360.
- OECD. (2024). Social Spending.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social-spending.html>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 사업단!

인터뷰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서지연 과장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권은영, 이의주
 진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김문정 부연구위원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원신원 차장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 지역 내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방문학습 활동으로 주로 퇴직 교사 및 전 교육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노인역량활용 일자리



Q. 000 인구 수 1,191,768명, 000 가구 수 415,584명, 000 혼인 수 20,431건, 000 출생아 수 12,150명. 000에 공동으로 들어갈 단어는?

답은 바로 '다문화'이다. 다문화는 여러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는 주로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와 관련된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말할 때 수치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때가 있다. 1,191,768명은 2023년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 수로 광역시 인구 수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인구는 2024년 기준 1,098,049명이다.

415,584명은 2023년 우리나라 다문화가구 수, 20,431건은 2023년 다문화혼인 수로 전체 혼인 중

10.6% 차지, 12,150명은 다문화출생아 수로 당해 연도 태어난 출생아 중 5.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인구, 다문화혼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이때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있어 인천 부평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나 보았다.

2021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사업을 추진한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서지연 과장과 권은영, 이의조 참여자들을 만났고,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참여자 대상 인터뷰 방식으로 지면에 담아보았다.

Q. 다양한 노인일자리 중 이 사업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서지연 과장 2021년부터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시작했는데요. 부평구 민간협력 네트워크에서 사례관리하고 여러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곳에는 다문화가정이 참 많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을 알고 추진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시 다문



화가구원 80,587명 중 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 수가 올해 18,209명(22.5%)이나 되거든요.

Q. 다문화가정의 자녀학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건가요?

·서지연 과장 부모님 전체가 다 외국인일 수 있겠지만 저희 센터 서비스 신청 조건은 부모님 한 분은 꼭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분 모두 외국인이신 경우 외국인 지원 센터에 지원을 받으면 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Q.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사업단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서지연 과장 현재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직 교사 또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신 교습 경력자 분들이십니다. 참여자와 대기자가 모두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남성분들도 소수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퇴직 이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셔서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참여 의지가 높습니다. 주중 매일 2군데 다문화가정에 가서 초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기초 학습지도와 함께, 체육, 음악 등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외국인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학교 관련 사항(가정통신문, 숙제, 준비물 등)에 대한 안내도 하십니다. 부모와 학교 선생님 간 커뮤니케이션도 도와드리는 거죠.

Q.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가면 일자리가 다양하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권은영 참여자 저는 사교육 현장에서 초, 중, 고 아이들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2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즐거움이 컸고, 아이들에게서 받는 에너지는 밝고 젊게 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천직이라 생각했는데 하던 일을 접으면서 인생 2막에 뭘 할까 고민했는데 도저히 가르치는 것 말고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사업을 알게 됐어요.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 지원했고, 운이 좋게도 참여할 수 있어 현재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의조 참여자 저는 퇴직 전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 교사를 했고,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뭘 좀 해볼까 하던 차에 집 앞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현수막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 벌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한지 3년째가 되었네요.

Q. 학습지원 도우미 활동내용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권은영 참여자 현재 초등학교 2, 3학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루 2명씩 주 5일 1시간씩 가르칩니다.

보통 2월 초에 학습 지도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 보니 '언어'가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과목에 대한 이전 학년 진단평가와 어휘력 등 짧은 탐색을 하고 교재 선택도 하고요. 우선 문제를 바르게 읽는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조사까지도 똑바로 읽게 합니다.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게 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한, 두 문제 그날 학습내용의 숙제를 줍니다.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종종 테스트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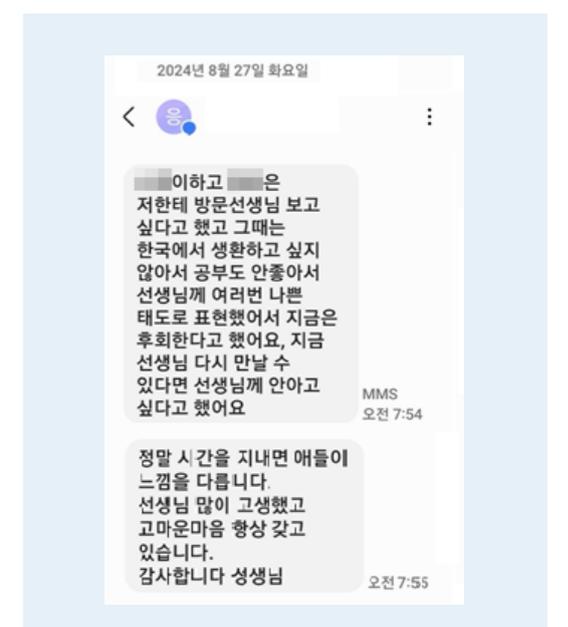
·이의조 참여자 저도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하루 2명을 1시간씩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과 진도를 참고하여 숙제나 미진한 학과목 위주로 같이 문제집도 풀고, 국어 읽기 위주로 수업도 해서 한국어 교정 부분에 힘쓰고 있어요.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의사소통 문제인데, 한국어 능력이 낮으면 점점 학습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Q.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보람있었던 일, 좋았던 점 등이 궁금합니다.

·서지연 과장 우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언어문제로 힘든데요, 더욱이 요즘은 수학 연산문제도 서술형 문제들이 많은데 그 단어 뜻도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부모님도 한국어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고 다른 아이들과 대화가 되니 소외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교육과 별개로 학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정 자녀 간 특별한 유대관계 형성도 되니까, 아이들이 옛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점도 담당하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권은영 참여자 작년에 가르쳤던 한 아이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얌전했어요. 말도 조그맣게 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야 학습효과도 있을 테니 라포 형성을 우선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목소리도 커지고 학교생활을 종알종알 얘기했지요.



학생 부모가 이의조 참여자에게 보낸 문자

어느 날 공부하던 중 게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바닥에 앉아 카드를 뽑고 종을 치는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근데 선생님 무릎 안 아프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하다니 너무 감격했죠.

“선생님 다리는 **이 가르치러 걸어 오고, 걸어 다녀서 더 튼튼해졌으니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해 줬어요.

그때 잠깐의 시간 동안 ‘내가 이런 예쁜 아이를 가르치고 있구나’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고 감사했어요. 마지막 수업 날에 아이가 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중 ‘최고의 선생님’이라며 꼭꼭 눌러쓴 빨간 하트가 그려진 편지는 아직도 감동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의조 참여자 저도 아이들이 낯선 학교생활에 소극적인 태도였다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 한국어 실력이 나아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어머니께서 감사 전화도 주셨을 때 등등 생각해 보니 보람찬 일이 많았네요.

좋았던 점을 꼽자면, 아이들 집에 가면 엄청 반갑게 나오면서 열렬한 환영을 해줍니다. 그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안 하면 누가 나를 이만큼 반가워 해주려나’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또 1:1 매칭 수업을 하니 아이들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Q. 오래 운영하시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요.

·서지연 과장 참여자분과 다문화가정 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나 학습 방식의 차이로 갑작스럽게 중단해서 다른 대가 가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한 외국인 어머니가 참여자분들이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냐라고 민원을 넣기도 하고, 또 집으로 가다 보니 가정불화 상황,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도 하고, 적극적 협력을 받아 이러한 상황들을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권은영 참여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처음에 외국

인 어머니가 서비스 활용법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시고 저는 집 앞에 다 왔는데 오늘은 수업 못 받는다거나 개인과외로 인식한다거나 그랬는데요. 이제는 수업에 출석 못 할 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의조 참여자 참여 첫해에 재혼가정의 양쪽 아이들이 서로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이들이 안 좋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SOS를 요청했죠. 꽤 시간이 흘러 그 가정의 어머니가 많이 안정되고 적응했다고 감사하다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두 분에게 노인일자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노인일자리는 ‘운명’입니다.”

권은영 참여자에게 노인일자리는 ‘운명’이라고 미소를 띄우며 말씀하셨다. 오랜 기간 운영해 오던 학원을 접으면서 앞으로 뭘 할지 마음이 복잡했던 이 시기에 딱 들어맞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삶의 활력’입니다.”

이의조 참여자는 퇴직 후 시간은 많았으나, 경제적으로는 좀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 일을 접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겼다고 한다. 우선 경제적 도움도 되고, 소속감도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규칙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제2의 인생’, ‘삶의 활력’이라 말씀하셨다.



Q. 향후 사업추진을 할 기관들에게 운영 노하우를 알려 주신다면요.

·서지연 과장 초반에는 다문화가정들의 특성을 몰랐었는데, 첫째로 아이들이 보통 방학 중에 대부분 엄마 고향으로 한 달 정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첫 해엔 여름방학기간에 참여자 교육을 진행했어요. 올해부터는 아이들 방학에 맞춰 방학기간을 일정 기간 두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 한 분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외국분이면 소통이 안 되어 수업이 힘들거든요.

Q. 노후의 시간이 긴데요. 노인일자리 참여 외에 일상의 루틴이 궁금합니다.

·권은영 참여자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는 가르치는 것 외에 할 게 많았어요. 각종 행정처리, 세무신고 등 부담되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 주중에 가르치는 것 외엔 할 게 없으니 마음도 활기차고 시간도 많이 남아 좋아요. 운동도 하고, 잘 못하지만 컴퓨터 공부도 하다가 시계를

보면 곧 아이들 가르치러 갈 시간이 옵니다.

·이의조 참여자 노인일자리 하기 전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좀 안 되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다니죠. 자동적으로 주중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주말에는 평일에 종이접기라든가 서점도 둘러보면서 아이들 가르칠 준비도 하고요.

Q. 노인일자리 참여하면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족 등 주변 반응이 궁금합니다.

·권은영 참여자 작년 첫 출근, 아이들을 가르치러 집을 나서면서 생동감 있던 제 자신이 기억납니다. 날씨가 추운 걸 느끼지도 못하고 참 발걸음이 가벼웠거든요.

수업 전날, 쌓기나무 상자를 일일이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이 일에 진심이구나.”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나이에든 식견도 넓어지고 편견은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이나 지금 가르치는 다문화 아이들



이나 모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어서 항상 즐거워요.

·이의조 참여자 규칙적으로 매일 할 일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긍정적 에너지가 나와서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접하니 해당 언어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훨씬 유연해지고 제가 활기 있으니 가족들도 좋아합니다.

Q.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서지연 과장 주변에 노인인구도 많이 늘지만 아직 저희 기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등 무조건 문을 두드려주세요.

·권은영 참여자 저는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소속감도 생기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또한 사업 담당자님께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의조 참여자 제 주변에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선 문을 두드리시면 본인 적성에 맞는 분야가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세요.

점차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교육의 어려움, 학력 격차 발생' 등 아이들의 성장단

계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관련부처에서도 다문화 아동, 청소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 적응에 필수적인 한국어 강사 보급은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그렇다면 퇴직 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경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교는 새 학기, 새로운 출발로 아이들과 부모님도 바쁘고 설레는 요즘이다. 아이들이 새로운 반, 친구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및 학습 지원에 한 몫을 하는 이러한 노인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길 바란다. 노인일자리가 이 아이들이 십 년, 이십 년 뒤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한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2024).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행정안전부(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본 간행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하였고, 해당 영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유튜브 내 업로드되어 보다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고령 사회의 살과일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미곤

편집위원장
이인재

편집위원
유태균, 이소정, 손규근, 신우철,
조준행, 박경하, 조홍영, 김문정, 장보현

등록번호
ISSN 2765-2777

발행일
2025년 3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와이즈타워)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전화
02-6731-6115

팩스
02-6731-6100

홈페이지
www.kordi.or.kr

웹진
kordi-webzine.co.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02-6731-6115)

-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책임지는 어르신 친화기업 버블세탁소

버블세탁소는 버블(Bubble)의 'B'를 세탁기로 형상화하고, 세탁소의 깨끗함을 물방울로 표현했다. 이처럼 위생과 깨끗함을 기본 슬로건으로 하여, 2024년 송파시니어클럽 버블세탁소의 문을 열었다. 버블세탁소는 2023년 인프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으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버블세탁소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버블세탁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 친화기업'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가지고, 현재 5명의 어르신이 세탁, 포장,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착한가격', '착한소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임대료나 권리금 등 고정비용이 들지 않아 '착한가격'을 만들어 내고, 이용하는 고객은 어르신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착한 소비'로 단순한 세탁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이 결과 현재 헬스장, 미용실 등 대량 세탁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과 거래를 맺으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버블세탁소는 단순한 세탁소가 아니다.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위생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업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착한 소비 문화를 확산해 나가려 한다. 버블세탁소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오늘도 버블 한가득, 깨끗함을 가득 싣고 전진하는 어르신 친화기업 버블세탁소의 힘찬 도약을 응원해 본다.



버블세탁소
Bubble Laundry

버블세탁소



- 주소: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4층
- 문의: 02-424-1255
- 홈페이지: <https://www.ssongpa.or.kr>



9 772765 277003

ISSN 2765-2777